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4대 의제 7개 분야별**

# **4개 정당 총선 공약 비교 평가**

정당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희망을 제시했나

2020. 4. 8.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목차

7대 분야별 정당 공약 한줄평	2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평가 단체 : 총선주거권연대)	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 단체 : 경실련·참여연대)	8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평가 단체 : 민주노총)	13
젠더 차별 혐오 근절 (평가 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15
기후위기 대책마련 (평가 단체 : 기후위기비상행동)	19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평가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22
정치·권력기관 개혁 (평가 단체 : 참여연대)	26

# 일러두기 : 2020총선넷은 공약평가 대상 정당을 20대 공약 및 과거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원내 5석 이상을 유지해온 정당으로 한정하였음.(원내 5석 이상이라도 최근 급조된 위장정당,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하였음.)

#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해 평가하였음.

## 7대 분야별 정당 공약 한줄평

평가 영역	정당	한줄 평가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민주당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통합당	‘뉴타운, 빛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그대로
	민생당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정의당	주거 안심 사회 기조 긍정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주당	지난 공약 재탕, 개혁의지 의문
	통합당	실종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의지 없음!
	민생당	부실하고 추상적인 재벌·경제민주화 공약
	정의당	종합적, 구체적인 공약 제시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민주당	노동의제 공약은 있지만 실현의지는 글썄...
	통합당	사업주 위한 노동 유연성 확대
	민생당	무늬만 노동 정책
	정의당	친노동자적 정책 제시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민주당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 아쉬워
	통합당	빈약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줘
	민생당	구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하기 어려워
	정의당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 제시
기후위기 대응	민주당	의지박약 - 허울뿐인 ‘그린뉴딜’
	통합당	기승전핵(발전) - 무관심과 무책임
	민생당	한참부족 - 핵심이 빠진 기후정책
	정의당	타의모범 - 기후위기 대응의 마중물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민주당	공공병원 확충 공약 희미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제시하는 집권여당
	통합당	공공은 사라지고, 영리만 남은 공약

	민생당	의료 공공성 확충해야 할 판에 규제 샌드박스 추진 원 말?
	정의당	명확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 제시, 칭찬해~
정치·권력기관 개혁	민주당	정치개혁 간데없고 권력기관 개혁 미지근
	통합당	정치개혁 역주행, 권력기관 개혁 과속 역주행
	민생당	정치개혁은 소극적, 권력기관 개혁 공약 전무
	정의당	충실한 정치개혁,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안

##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평가 단체 : 총선주거권연대)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산 불평등 개선	(없음)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li> <li>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인상률 상한제 도입</li> <li>세입자의 대항요건 강화('인도 및 주민등록한 즉시'로 법개정)</li> <li>계약갱신거절 사전통지 기간 확대(현행 1개월 전 → 2~6개월 전)</li> </ul>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없음)
미래통합당	자산 불평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li> </ul>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공간 제공</li> <li>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li> </ul>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가상한제 폐지</li> <li>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향상과 가전 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li> </ul>
민생당	자산 불평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li> <li>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li> <li>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li> <li>임대사업자 특혜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li> </ul>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청약제도 개편</li> <li>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실시</li> </ul>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li> <li>분양가 평당 1천만원 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조성</li> </ul>
정의당	자산 불평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li> <li>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li> <li>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정보 공개</li> <li>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li> <li>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li> </ul>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li> <li>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li> <li>▪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li> <li>▪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li> <li>▪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li> <li>▪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확대</li> <li>▪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li> <li>▪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li> <li>▪ 최저주거기준 등 개선,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li> <li>▪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li> <li>▪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 위해 반의 반값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li> <li>▪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직접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li> <li>▪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li> <li>▪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li> <li>▪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li> <li>▪ 표준건축비 도입</li> <li>▪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li> </ul>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으나 지난 국회 의정활동을 볼 때, 실제 입법화에 나설지 미지수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은 대거 제외되는 등 20대 총선과 19대 대선공약보다 크게 후퇴함.
-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된 공약만 존재함.
- 높은 주택가격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공약도 전무함. 주택 공급 계획도 오직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인한 취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금융 외에는 제시하지 못 해, 빚내서 집 사고 전세 내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 있음.

### 2) 미래통합당 :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그대로

-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에 집중함.

-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주택공급이 늘어날지는 불분명한 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약도 전무함.

### 3) 민생당 :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시세 상승분 대비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은 근거가 부족함.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 투기 억제나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시장 개혁 요구와 일맥상통하지만 공약의 대규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 오히려 노후주택 재건축, 재개발 적극 추진, LTV DTI 폐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공약이 다수 제시됨.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없고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전무함.

### 4) 정의당 : 주거 안심 사회 기초 긍정적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이 제시됨. 기업과 펀드를 통한 토지 투기에 대해 그동안 과도하게 관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약임.
- 임대차 관련 정책, 주거복지 정책 등 대부분의 주거정책이 제시됨. 다만 1인 청년 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중 대출에 관한 공약은 근로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단기적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대출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바람직하나, 연 10만호 공급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근시일 내 대규모로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 단체 : 경실련·참여연대)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 당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li> <li>▪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해 기업에 손해를 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지원을 방지)</li> </ul>
	황제경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등 도입 및 재벌 대주주 일가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li> </ul>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li> </ul>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예방 조치 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li> <li>▪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주요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제 폐지</li> <li>▪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부문뿐 아니라 하도급 및 유통 부문에 시도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li> <li>▪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li> </ul>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소유통상인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지원</li> </ul>
미래통합당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없음)
	황제경영 방지	(없음)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없음)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기준 개선</li> <li>▪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불합리한 형벌규정 정비</li> <li>▪ 고의적·반사회적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li> <li>▪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li> </ul>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없음)



민생당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소송제 확대</li> </ul>
	황제경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범죄 형량 강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li> <li>▪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li> </ul>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없음)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없음)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없음)
정의당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li> <li>▪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기업에 계열 분리명령제 도입</li> </ul>
	황제경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li> <li>▪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주주대표소송 시 소제기 요건 완화(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 주주대표소송 시 단독 주주권 도입)</li> <li>▪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와 온라인 투표방식인 전자투표제 의무화</li> <li>▪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li> <li>▪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 의무화</li> </ul>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의무 보유 요건 강화 등 지주회사 규제요건 강화</li> <li>▪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li> <li>▪ 분할 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li> <li>▪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li> <li>▪ 금융회사 계열사의 금산분리 강화(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 험사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li> </ul>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li> <li>▪ 협력업체의 종속 관계 유발하는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li> <li>▪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li> <li>▪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제) 도입</li> <li>▪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 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li> </ul>

		도입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지역 지원을 위해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li> <li>▪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허가제로 변경, 도시계획 입안시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시행,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일제 확대, 대기업 품수 출점 방지</li> </ul>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지난 공약 재탕, 개혁의지 의문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고, 구체적인 확대 범위와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흡함.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황이 경제력 집중해소에 다소 도움은 되나, 근본적 대책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금지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지주회사 규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주회사제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 당시에도 공약한 바 있는 재탕 공약임. 이사회 개혁 부분도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냈지만 이후 추진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겠음.
- 하도급 분야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대 총선 당시, 복합쇼핑몰 등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의 입지규제를 명시했던 것과 달리,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으로 담길 내용은 언급이 없어 모호함.

### 2) 미래통합당 : 실종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의지 없음!

- 19대 총선 및 20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등 관련 공약이 있었으나 이번 총선 공약에는 해당 분야 공약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줌.
- 공정위의 범집행, 불합리한 형벌 규정 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고의적, 반사회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범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상반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음.

-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 공약 없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공약 중심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오히려 규제완화 공약을 대거 제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함.

### 3) 민생당 : 부실하고 추상적인 재벌·경제민주화 공약

- 기업범죄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형량 수준 등 언급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없는 집단소송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집단소송제 확대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추상적인 공약에 지나지 않음.
- 유통분야의 공정경제 관련 공약이 없음. 대신 코로나19 대책을 통한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밝힌 점은 특기할 만함.

### 4) 정의당 : 종합적, 구체적인 공약 제시

- 시장지배력 남용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계열 분리명령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임.
- 황제경영 방지를 위해서는 총수일가 및 우호지분 등을 제외한 일반 소수주주들의 동의 하에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가 절실함. 이러한 측면에서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은 바람직한 대책임. 단독주주권과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은 주주권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바람직한 방향임. 사외이사 무력화 방지와 총수에 우호적인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중요함.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관련 공약은 이를 위한 개혁적인 공약으로 평가함.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상향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과 거리가 멀고 원칙적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은 필요성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제한 방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승계 차단하는 방편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금지를 공약한 것은 개혁적이고 구체적 공약이라 평가함.
- 하도급 분야와 상생구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제시해 긍정적임.

- 유통재벌 진출 규제와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한 정책, 서비스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약이 종합적·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평가 단체 : 민주노총)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태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li> <li>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li> <li>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li> </ul>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li> </ul>
	중대재해발생 기업 가중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부여</li> <li>산재 발생 원청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li> </ul>
미래통합당	전태일법 개정	(없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없음)
	중대재해발생 기업 가중처벌	(없음)
민생당	전태일법 개정	(없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없음)
	중대재해발생 기업 가중처벌	(없음)
정의당	전태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li> <li>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li> </ul>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 및 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li> </ul>
	중대재해발생 기업 가중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책임 강화</li> <li>도급 금지업종 확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li> </ul>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노동의제 공약은 있지만 실현의지는 글썸...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을 공약하였으나, 동일한 입법과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에 비추어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산재 보험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형사처벌 가중 등 추가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임.

## 2) 미래통합당 : 사업주 위한 노동 유연성 확대

-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공약이 전무함. 대신,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이라는 제목 하에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포함시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개혁만을 공약하였음.

## 3) 민생당 : 무늬만 노동 정책

- 일자리 정책이나 구직자를 위한 정책은 있으나,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책이 전무함.
-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고용안정성 함양 공약은 해고를 제한하는 근본적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제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문제임.

## 4) 정의당 : 친노동자적 정책 제시

- ‘전태일법’이라는 표제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 발생기업 처벌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가장 친노동자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수정당으로서 입법 능력과 입법 전략의 미흡이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음.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평가 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및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li> <li>▪ 임신중지 비범죄화 공약 없음</li> </ul>
	사이버 성폭력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li> <li>▪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li> <li>▪ 불법촬영물 차단에 시기술 도입 및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한 삭제지원서비스 구축</li> <li>▪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유포협박·사진, 영상합성 등 행위양태 확대하여 처벌규정 마련</li> </ul>
	성별임금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정보 보고 의무화, 주요 항목 임금분포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공시하는 임금분포공시제 도입</li> </ul>
	가정폭력범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 체포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원칙적 폐지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li> <li>▪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대응 책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아동보호 협조체계 구축, 피해 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전문 인프라와 인력 확충</li> </ul>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음)
	학생 인권 제도화	(없음)
미래통합당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및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없음)
	사이버 성폭력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 이용 협박도 처벌대상에 포함, 영상협박 피해자도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li> <li>▪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li> </ul>
	성별임금격차 해소	(없음)

	가정폭력범죄 근절	(없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음)
	학생 인권 제도화	(없음)
민생당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및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간음죄’ 신설</li> <li>▪ 임신중지 비범죄화 공약은 없음</li> </ul>
	사이버 성폭력 근절	(없음)
	성별임금격차 해소	(없음)
	가정폭력범죄 근절	(없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음)
	학생 인권 제도화	(없음)
정의당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및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강간죄’ 조속 도입</li> <li>▪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li> </ul>
	사이버 성폭력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성폭력특례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li> <li>▪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유포, 재유포시 가중처벌, 합성 영상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li> <li>▪ 피해자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강화</li> <li>▪ 불법촬영물 공급망(사이트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등) 단속처벌강화</li> <li>▪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시 삭제, 전송방지, 중단 조치에 대한 의무 부과 등</li> </ul>
	성별임금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성차별 금지 :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 채용 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li> </ul>



		여성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추진 ▪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 실태조사, 성별임금공시와 후속조치의 정부 책임 강화, 정부 컨트롤 타워 수립 등 명시,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강화 등
	가정폭력범죄 근절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피해여성 인권보장 확대 : 입법목적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가해자 보호처분 관리감독 강화, 피해자 조기 응급대응 및 보호, 자립지원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추가하고, 차별행위 처벌과 예방, 구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학생 인권 제도화	▪ 학생인권의 내용 명시 및 피해 구제 방안 등 명시한 학생인권법 마련 ▪ 초중고 인권교육 확대 ▪ 노동인권교육, 직업교육 활성화 ▪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마련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 아쉬워

-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로 매우 소극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보낸 정책질의서에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에는 찬성 답변을 보내온 바 있음.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고, 국회는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음. 하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에 동의한 바 있음.
- 사이버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여 차별성을 보임.
- 임금분포 공시제를 공공기관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 민간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임금분포 공시제는 차별을 보이게 하는 수단이고, 차별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공약은 빠져있음.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목적조항 개정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폐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임.
-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보낸 정책질의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 답변을 보내온 바 있음.

## 2) 미래통합당 : 빈약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줘

-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대한 공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음. 제시된 사이버 성폭력 근절 공약도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빈약하고 부실함.

## 3) 민생당 : 구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하기 어려워

- ‘동의 간음죄’ 만 공약으로 제시, 다른 4개 분야에 대해서 공약 없음. ‘동의 간음죄’란 생소한 용어사용으로 공약의 취지에 대해 알 수 없음.

## 4) 정의당 :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 제시

- ‘강간죄’ 개정의 조속한 도입을 공약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유일하게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약속해 돋보임.
- 디지털 성폭력 범죄 종식을 위해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법제도 정비 공약을 담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산업 유통구조와 서비스제공자의 문제까지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과 채용성차별 금지를 위한 공약을 내놓음.
-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 폐지 공약을 제시함.
-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함.
-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학생인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학생인권법, 노동인권교육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공약한 것은 긍정적 평가함.

## 기후위기 대책마련 (평가 단체 : 기후위기비상행동)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및 국회 특위 구성	(없음)
	탄소배출제로 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 법' 제정	(없음)
	탈탄소사회 전환 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li> </ul>
미래통합당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및 국회 특위 구성	(없음)
	탄소배출제로 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 법' 제정	(없음)
	탈탄소사회 전환 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없음)
민생당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및 국회 특위 구성	
	탄소배출제로 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021년)</li> </ul>
	탈탄소사회 전환 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li> <li>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li> <li>호남권 등 기후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li> <li>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li> </ul>
정의당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및 국회 특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li> </ul>
	탄소배출제로 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제정</li> <li>▪ 온실가스 배출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 2050년 순제로 달성</li> <li>▪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li> </ul>
	탈탄소사회 전환 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li> <li>▪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li> <li>▪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li> <li>▪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저 프로젝트' 추진</li> <li>▪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사업 추진</li> <li>▪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li> <li>▪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li> </ul>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의지박약 - 허울뿐인 '그린뉴딜'

-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직시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비상상황에 걸맞게 국정목표가 전환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그러나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전무함.
-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수준의 공약으로 미흡함. 기후정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공약도 없음.
- '2050년 탄소제로사회', '그린뉴딜', '탄소세 도입', '석탄금융지원 중단' 등 그동안 언급하기를 꺼렸던 정책을 집권당이 공약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비해 구체성이 매우 부족함.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민간주도 투자 확대', '세제감면', '스마트-그린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시장과 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존 내연기관차나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어떻게 할지는

언급이 없음.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같은 정부구조 개편 방안이 없음. 석탄발전 감축도 언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탄소세도 ‘도입 검토’ 수준임. 아울러 구체적인 자원조달 규모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2) 미래통합당 : 기승전핵(발전) - 무관심과 무책임

- 명시적인 기후 공약 없음. 반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경제 공약에 포함하고 있음.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약임.

## 3) 민생당 : 한참부족 - 핵심이 빠진 기후정책

- 탄소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녹색뉴딜을 내세웠으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제한된 부문 중심의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4) 정의당 : 타의모범 - 기후위기 대응의 마중물

-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비상선언 결의에 대한 명시적 공약이 없음.
- 기후위기대응법과 유사한 형태의 특별법을 공약으로 제시함. 2050년 배출순제로 목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제시함.
- 구체적인 사회경제전환 공약, 자원조달의 규모와 방안 공약으로 제시한 점 긍정적.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전환의 계획,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마련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음.

##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평가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li> <li>▪ 일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li> <li>▪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li> <li>▪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li> <li>▪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연구역량 강화, 백신·치료제 개발 선도 육성</li> <li>▪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li> </ul>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없음)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li> <li>▪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li> </ul>
미래통합당	공공의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li> <li>▪ 감염병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li> <li>▪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li> <li>▪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li> <li>▪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개선</li> <li>▪ 보건복지부에 간호전담부서인 '간호정책과' 설치 및 간호사 처우 개선</li> </ul>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li> <li>▪ 건강보험 기금화 실시</li> </ul>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li> </ul>
민생당	공공의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li> <li>▪ 감염취약계층(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관리 인프라개선, 감염병 표준매뉴얼 등 마련</li> <li>▪ 대구지역 국립 감염병전문병원, 신종바이러스 연구소 운영</li> <li>▪ 대전의료원 설립, 전북대 약대 연계 첨단신약개발단지 조성, 경남권 산업안전대책 수립,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li> </ul>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보험료 부과 폐지(과표기준 3억원, 시가 약 6억원)</li> </ul>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관련 법령 우선 처리</li> </ul>
	공공의료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li> </ul>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li> <li>▪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li> <li>▪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li> <li>▪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및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li> </ul>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병수당 도입</li> <li>▪ 건강보험 연간 100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li> <li>▪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건강보험급여 내 실손형 판매금지, 보험사 횡포방지 등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li> </ul>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없음)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공공병원 확충 공약 희미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제시하는 집권여당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감염병 사태의 잦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의대정원 증원,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등의 공약은 긍정적임. 그러나 공공병원 확충을 몇개 지역만 한정하여 제시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공공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대안을 공약하지 않은점에서 미흡함.
- 바이오헬스 육성 공약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연장선에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의료시장화를 촉진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문제임.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 미래통합당 : 공공은 사라지고, 영리만 남은 공약

-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공약은 유의미하나, 공공운영,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 제시가 없어 감염병 대책으로 미흡함.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개선 공약도 운영의 공공성 확보방안이 누락되어 한계가 있음.

- 자산불균형이 심한 한국에서 재산을 완전히 제외한 부과체계 개편은 역진적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즉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은 문제가 있음. 또한 건강보험 기금화 공약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권한을 어느 조직이 더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에 불과하여 의미가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완화법으로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여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임.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문제 공약임.

### 3) 민생당 : 의료 공공성 확충해야 할 판에 규제 샌드박스 추진 웬 말?

- 민생당이 제시한 공공의료 체계 확충,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정책은 의미 있으나, 대전 등 일부 지역정책으로 국한되어 있고 현 상황에서 필요한 권역별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함.
- 국민건강보험부과체계는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를 감안한 보험료 국고 보조의 지속 및 확대, 일정 자산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재산보험료 부과 면제를 확대하겠다는 민생당의 공약은 가입자 간 형평성 추구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임.
-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민생당의 규제샌드박스 촉진 공약은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켜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 4) 정의당 : 명확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 제시, 칭찬해~

- 질병관리본부 승격, 의료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주치의제 도입을 기반으로 하는 일차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국가 건강관리 책임제' 등은 의료의 공공성과 전달체계 개편을 표명한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공약사항임. 특히,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이 제시하지 않은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정의당이 공약한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국가책임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질병으로 인해 소득감소 분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 과제임.

## 정치·권력기관 개혁 (평가 단체 : 참여연대)

### 1. 4개 정당 공약 주요 내용

정당	분류	공약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없음)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없음)
	일하는 국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 임시회 소집 의무화</li> <li>임시회 직후 상임위 자동 개회</li> <li>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li> <li>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안건은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종료, 단 30일 연장 가능 / 국민 배심원단 신설해 심사결과 권고 / 징계 종류에 '6개월 간 수당 등 지급정지' 추가)</li> <li>불출석시 단계별 세비 삭감(예외 제외), 출석정지 등 징계규정 신설</li> <li>국민소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권자 5%의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li> </ul> </li> </ul>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li> <li>민주시민교육 진흥법 제정</li> <li>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자치 기반 마련 등</li> </ul>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내 설치 조속 추진</li> <li>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여부를 끊임없이 감시</li> <li>자치경찰제 실시, 국가경찰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 하고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 수행</li> <li>개방직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및 수사지휘 배제</li> <li>시도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추천권 다양화</li> </ul>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연동형 선거제 폐기를 통해 정상적 선거제 운영</li> </ul>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없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없음)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 처벌 근거 마련하여 교단에서 배제</li> </ul>
	검찰·경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수처 폐지</li> </ul>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 인사위원회 독립, 구성 다양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분리</li> <li>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li> </ul>
민생당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없음)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없음)
	일하는 국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선진화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가중다수제를 단순다수제로 변경</li> </ul>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li> <li>상시 국회, 상시 청문회, 상시 국정감사 도입</li> <li>21대 국회 4년간 예산 동결, 국회 예산구조 개혁</li> <li>예산총액의 상한선 설정 국회각종 수당의 통폐합,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로 통합</li> <li>국민소환제 도입</li> </ul>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없음)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없음)
정의당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li> <li>결선투표제 도입(대통령선거, 지자체장 선거)</li> <li>재보궐선거 사유 정당의 공천 불허 및 선거비용 50% 부담</li> </ul>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 : 지역구 여성공천 현재 권고 30% 의무화, 미준수시 불이익 조치</li> </ul>
	일하는 국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 상정 및 상임위 처리기한 설정으로 법안 처리율 제고</li> <li>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저임금 5배까지 연동 상한제 도입(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li> <li>셀프금지 3법(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윤리심판원, 국회활동심사평가위원회 구성)</li> <li>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이해충돌 심사기구 마련), 백지신탁 제도 강화 (직무관련성 관계 없이 모든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의무화)</li> <li>쪽지예산 근절, 밀실거래 관행 없앰, 예결위 상임위로 전환</li> <li>교섭단체 요건을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하고 국회운영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li> <li>인사청문 기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확대</li> <li>윤리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 분리, 윤리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전환</li> <li>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소환제 도입</li> </ul>
	청소년 정치참여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권 연령 만 16세,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li> <li>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li> </ul>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기준을 폐지해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li> <li>▪ 민주시민교육 활성화</li> <li>▪ 학내 자치기구 및 초중고 행정실 법제화</li> </ul>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li> <li>▪ 옴부즈맨제도 도입 및 운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li> <li>▪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li> <li>▪ 대부분의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li> <li>▪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가진 실질적 경찰감독 기구로서 시민참여 경찰위원회 설치</li> <li>▪ 정보경찰 폐지</li> </ul>

## 2. 정당별 공약 약평

### 1)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간데없고 권력기관 개혁 미지근

- 정치개혁 :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했음에도 최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하여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퇴행시키고도 선거제 개혁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남성 독점 정치 구조 개편 공약 없음. 일하는 국회 관련 공약은 비교적 충실하게 제시한 듯 보이나,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고도 처리를 위한 노력이 없었음. 이제와 다시 공약으로 내세움. 국민소환제는 현재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공약,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공약 있음.
- 권력기관 개혁 : 7월에 시행예정인 공수처 연내 조속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등의 공약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음.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방향에 맞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이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안하고, 개방직 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방안도 한계가 있는 공약을 제시함. 야당이었던 20대에 비해 집권여당이 된 21대에서는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이 빠지고, 경찰개혁도 방향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국정원 개혁 공약은 제시하지 않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전반적으로 미온적.

### 2) 미래통합당 : 정치개혁 역주행, 권력기관 개혁 과속 역주행

- 정치개혁 : 위성정당을 설립해 헌법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공약하는 등 개혁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남성 독점 정치 구조 개편이나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원내 제2당으로 무책임한 태도임. 청소년 정치참여에도 역행하는 공약을 제시함.
- 권력기관개혁 : 국민적 오랜 요구로 만들어질 예정인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검찰에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는 개혁 역주행 공약을 제시함. 경찰개혁 관련 공약 제시 없음.

### 3) 민생당 : 정치개혁은 소극적, 권력기관 개혁 공약 전무

- 정치개혁 : 제2야당임에도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만 집중됨.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은 기존 공약을 반복하여 제시하였고 독창적 내용을 찾기 어려움. 국민소환제 공약 제시.
- 권력기관개혁 : 공약집 발간도 가장 늦었고 평가할 관련 공약 자체가 없음.

### 4) 정의당 : 충실한 정치개혁,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안

- 정치개혁 :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공약하는 등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걸맞는 공약 제시.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남성독점의 정치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공약으로 지역구 여성공천 현재 권고 30% 의무화, 미준수시 불이익 조치 제시. 2016년에 비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 역시 구체적이고 독립적 윤리심판원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등 독창적인 공약을 제시함. 청소년 선거권을 16세로 제시, 정당가입 허용 등 참정권 확대에 전향적인 공약 제시. 국민소환제도 공약함.
- 권력기관개혁 : 20대에 이어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공약하고, 옴브즈맨 제도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함. 대부분의 권한을 자치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를 공약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지닌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 설치를 공약함. 정보경찰 폐지도 4개 정당중 유일하게 공약으로 제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함.

2020총선넷 정책자료집  
**4개 정당, 분야별 총선 공약 평가**

발행일 2020. 04. 08.

발행처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참여연대 이선미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 본 자료는 [2020총선넷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가단체(총 25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4월 6일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슴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